

국감 오르는 이재명 ‘운명의 일주일’… 대권가도 ‘시험대’

오늘 행안위, 20일 국토위 출석
추,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예고
여야, 대선전 최대 승부처 전망
국감성적 따라 민심 향방 좌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을 위한 운명의 일주일에 돌입했다. 국회 국정감사 이슈를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 없이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 후보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감 준비에 주력했다. 더욱이 국감 이후 지지 사퇴를 결정할 이 후보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을 말끔하게 털고 가지 않는 이상 대권 후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 이후 벌어진 당내 갈등은 이연연 후보의 승복 선언으로 한숨은 돌린 상태. 이재명 후보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이 후보의 대응에 따라 민심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어 이 후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를 못 받고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

는 이 후보로서는 국감을 통해 그간 국감에서 보여왔던 특유의 ‘사이다 발언’ 등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취임 후 3차례의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아내며 유명세를 떨쳤다.

그렇기에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통해 격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 ‘설계자이자 몸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배임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등을 내세우며 이 후보를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국감에서 허위발언에 대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 경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당 차원으로 대응한다. 국감 특성상 경기도 국감은 피감기관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

방어와 화천대유와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공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을 단장으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도 발을 맞춰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대장동을 매개로 윤석열·김만배·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다. 게다가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이고, 김만배 씨 누나는 윤석열 후보 부친 저택을 매입했다”며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연’이라 했다. 로또 당첨 확률보다 어려운 이런 ‘우연’이 윤 후보와 박 전 특별검사,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토건세력은 민간 개발 추진하며 개발이익 100% 독식하려 했고, 이재명은 이들과 싸우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려다 50%~70%를 환수했고, 토건세력 몫 개발이익 나눠 가진 것도 국힘”이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같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에게는 국감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팀’ 기조로 국감 이후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를 비토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 자체가 이 후보로서는 호재다.

문 대통령의 일정상 이 후보와의 만남은 21일~22일 사이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의 면담은 선거법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발언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도 이 후보와의 면담을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 없다”면서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만난 전례도 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에게는 국감과 문 대통령 면담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이레저래 운명의 일주일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홍준표, 최재형 영입… 3차 컷오프 ‘정조준’

3차 컷오프, 당원 투표비율 높아
보수 색 짙은 인물로 잇따라 영입
洪, 안철수와 연대 가능성도 시사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릴 3차 컷오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늘어, 중도층보다 보수 지지층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색깔이 뚜렷한 정치인들을 영입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3차 컷오프는 지난 1차(당원 투표 20%·국민여론조사 80%), 2차(당원 투표 30%·국민여론조사 70%)와 비교해 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고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한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연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연속해서 영입한 홍 의원은 17일 최 전 원장까지 품으며 ‘세 불리기’에 집중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정적, 도덕적, 확장적이라 면에서 고민하고 선택했다”며 홍 의원 이미지 부각에 열중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재형 원장을 영입하면서 상징적으로 세를 불렀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최 전 원장과 홍 의원의 지지층이 상당 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7일 여의도 홍준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행사를 치르며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 투표 비율이 높아진 3차 컷오프에 앞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뉴스

분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기반으로 겹치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본선 통과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홍 의원 자체가 중도층에서 인기가 높고 확장성이 있다”며 “문제는 경선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잡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분들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경선을 함께 치른 안전시장과 최 전 원장을 영입한 것은 “국민의힘 ‘원팀을 이끄는 후보는 홍 의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연주 전 의원 영입이 언론과의 소통 창구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는 대변인과 공보단이 종편 패널로 섭외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도 종편에 나가고 계신 이전 의원

을 선대위원장급으로 모셨다”고 했다. 홍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건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 이야기”라고 했다.

박상철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경선을 상당원투표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홍 의원이 탄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집토끼(전통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최 전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치인인데, 견고한 지지층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총장도 이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공식 영입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를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우리 국민의 필승 후보는 윤 전 총장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강제징용 현안 이견… 협력 필요성엔 공감

文 대통령, 기시다 日총리와 통화

文, 임기 내 관계복원 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복원’에 공감한 것과 별개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만만치 않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상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남·북·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와 첫 정상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협업과 소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이 반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본 측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한 바 있다. 이후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다. 이에 일본 측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한·일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협업과 소통’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일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는 ‘북한 문제’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라는 두 트랙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두 트랙 방식으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 문제는 ‘일단’ 두고, 관계 개선 여지가 있는 대북 외교나 인적 교류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